

2014 서울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4.6.28 시행)

예년의 서울시7급과 비슷한 수준과 경향으로 출제되었다. 예상한대로 기출문제나 암기위주의 출제비율이 줄어들어 기출문제는 2문제에 그쳤다. 특히 법령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지문들이나 신경향문제들이 일부 상당수 선보였으며 이로 인해 체감난이도가 약간 높아졌다. 그런 일부 생소하고 신경향의 문제들이 까다롭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선행정학 기본이론 수업을 통해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마지막 동형 문풀, 라이브특강까지 커리를 충실히 봤은 수험생들이라면 충분히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출제였다.

예컨대 문1의 주민소환제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알아야하는 문제였고, 문10의 조직문화접근법은 보통의 문헌에 소개되지 않는 생소한 문제였다. 문12의 공무원신분에 대한 문제는 신경향문제이지만 소청대상과 강등과 강임의 차이 등을 수업 때 강조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15의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도 처음 출제된 문제이지만 수업 때 강조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13의 정부3.0은 최근 유행하는 문제라며 수업이나 라이브특강에서 강조했던 주제였다.

다만, 문5의 정책평가, 문6의 효과성평가모형, 문7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문제의 경우 일부 지문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다. 또한 조직문화에 관한 서로 연관된 까다로운 문제를 동일한 학자들의 논문에서 두 문제(문6의 조직문화접근법과 문10의 경합가치모형)나 출제하여 변별력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 분야별 출제비중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자치
4	2	4	2	4	2	2

- 김중규 -

0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자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답] ②만 옳다.

☑ ①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 ③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직접참여방식이다.
- ⑤ 14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소청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014 선행정학 p. 670

0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답] ④ 공유지의 비극이란 1968년 Hardin이 제시한 개념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의 경우 아껴 쓸 유인이 작용하지 않아 전체적 합리성보다는 개인적 합리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낭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유지가 황폐된다는 시장실패를 설명한 모형이다. 이에 Hardin은 공유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공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명확화(사유화)하거나(코즈의 정리), 둘째,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방안, 셋째, 각자 스스로의 양심으로 공유지를 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Hardin은 세 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첫째와 둘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2014 선행정학 p. 17

0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답] ② 사회적 자본은 교환관계는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 아니다.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은 경제적 자본의 거래방식이다.

■ 사회적 자본의 특징

- ① 행위자들간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
- ②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
- ③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유지되는 자본
- ④ 등가물의 교환이 아님 : 사용한 만큼 줄고 사용한 만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용할수록 총량이 느는

선순환과 사용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의 양면성
⑤ 교환의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음

☞ 2014 선행정학 p. 28

0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답] ④ 특정평가는 둘 이상의 중앙부처간 연관성이 있거나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권 차원의 관심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 사업이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을 평가·관리하는 것이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 ②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 ③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 ④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 2014 선행정학 p. 246

0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한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답] ⑤ 우리나라의 경우 세출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중에서 부처별로 매년 1/3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을 자율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다.

- ☑ ① 구성적 타당도가 아니라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에 해당한다.
②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③ 질적 평가는 귀납적 방법, 양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④ 평가의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이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이란 플그램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의 인과경로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핵심적 목표와 연계된 평가이슈, 평가지표를 인식하고, 이론실패와 실행실패를 구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

☞ 2014 선행정학 p. 250

0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퀴나와 로보그

(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답] ④ 조직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은 합리적 목표모형으로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목표로 하게 된다. 성장과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형은 조직외부에 초점을 두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모형에 해당한다.

■ Quinn & Rohrbaugh의 경쟁적 가치집근법

가치	조직(외부)	인간(내부)
통제	<합리목표모형> - 합리문화 • 목적 : 생산성, 능률성 • 수단 :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 위계문화 • 목적 : 안정성, 통제와 감독 • 수단 : 정보관리, 의사소통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 발전문화 • 목적 : 성장, 자원획득, 환경 적응 • 수단 : 유연성, 융이함	<인간관계모형> - 집단문화 • 목적 : 인적자원 발달, 팀워크, 능력발휘, 구성원 만족 • 수단 : 응집력, 사기

☞ 2014 선행정학 p. 81

0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답] ②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가 초래하는 영향을 좀 더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작용은 규제영향분석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 2014 선행정학 p. 47

08.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답] ③ M.Weber의 이상적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이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전문성에 의한 충원을 강조한다. 정치적 전문성은 엥관료제에서 강조하는 인사기준이다.

☞ 2014 선행정학 p. 311

0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답] ③ MBO는 참여에 의한 관리로 Y이론에 토대를 두는 인본주의 고관전략이다.

☞ 2014 선행정학 p. 276

10.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답] ④ Saffold(1988)의 조직문화접근법에 따르면 ④는 상황론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강도적 접근법의 특성에 해당한다.

● Saffold의 조직문화접근법(1988)

특성론적 접근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특성이 존재한다는 것. 긍정적인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효과성이 높다는 것
문화강도적 접근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 조직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

상황론적 접근방법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들간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	각각의 문화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나 조직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답] ② ②만 옳다.

-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내부화가 필요하다.
 ③ 내부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조직통합이나 내부조직화가 효과적이다.
 ④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비한 탐색비용 등이 모두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⑤ 거래비용경제학은 원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 2014 선행정학 p. 347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총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 ⑤ 강입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답] ① ①만 옳다.

- ☑ ② 당연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사유이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지만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④ 직위해제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못할 뿐 신분은 유지된다.
 ⑤ 강입은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하위직위로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다. 강등과는 다르다.

☞ 2014 선행정학 p. 448

1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답] ③ 계급제는 부서간, 공무원간 횡적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다.

■ 계급제의 장단점

장점	· 인사의 융통성 확보 · 안목과 창의력 개발 · 신분보장, 경력발전 · 적재적소 인사배치 · 부서간·공무원간 교류와 협력 원활
단점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공직의 경직성 · 환경대응성 저하 · 특권집단화(폐쇄집단화) · 집단이익 옹호 · 연공서열에 의한 무능 · 계급간 승진이 용이하지 않음

☞ 2014 선행정학 p. 401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 ① 과년도 지출
-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③ 예비
- ④ 선박의 운영,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답] ① 과년도지출은 긴급배정 대상경비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긴급배정 대상경비이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긴급배정 대상경비 (예산의 배정)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예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 2014 선행정학 p. 542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⑤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예산과 법률은 형식과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 2014 선행정학 p. 472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답] 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은 지출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채무부담의무만 인정하거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한 것이다.

☞ 2014 선행정학 p. 545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답] ④ ④는 행정부계획의 원칙으로 현대적 원칙에 해당한다.

■ 예산의 원칙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 공개성의 원칙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 통일성의 원칙	· 행정부계획의 원칙 · 행정부책임의 원칙 · 보고의 원칙 ·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 · 행정부 재량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 2014 선행정학 p. 482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답] ⑤ ㉠, ㉣은 틀리다. ㉠의 경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냐 불체표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지방의원들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광역과 기초 막론하고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이 가능하다.

☞ 2014 선행정학 p. 638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답] ⑤ 시민의 행정참여는 행정의 전문성이나 정책결정의 능률은 저하시키지만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의 정책순응과 협조가 촉진되어 전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행정참여

효 용	한 계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당성 실현 - 정책의 신뢰성 향상과 정책에의 순응 확보 - 정책의 현실성 및 적실성 제고 -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정책 순응 유도 - 행정의 책임성 제고 : 행정 통제 강화	- 대표성의 문제 : 활동적 소수의 폐단 - 전문성 저하 : 현대행정의 복잡성 - 책임의 전가 - 갈등의 증폭 : 정책거부점 - 행정의 능률성 저해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비용 증가

☞ 2014 선행정학 p. 574

20. 최근 정부의 ‘정부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②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②의 인터넷은 정부1.0에 해당하며, 정부3.0은 국민과 정부의 면대면 접촉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③의 플랫폼정부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로서 정부3.0의 지향점이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3. 민관협치 강화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2014 선행정학 p. 599